

[ESG] 환경(E), 사회(S)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 및 최근 ESG 관련 주요 이슈

2024.11.27

기업평가본부	홍석준	실장	02-787-2224	sjhong@kisrating.com
	정익수	수석연구원	02-787-2276	iksu.jeong@kisrating.com
	장수명	수석연구원	02-787-2206	sumyeong.jang@kisrating.com
	오윤재	수석연구원	02-787-2238	yoonyae.oh@kisrating.com
	유영빈	선임연구원	02-787-2327	youngbin.yoo@kisrating.com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이승민	선임연구원	02-787-2245	seungmin.lee@kisrating.com
	오유나	수석연구원	02-787-2314	yuna.oh@kisrating.com
	강병준	연구위원	02-787-2207	byoungjun.kang@kisrating.com
평가정책본부				

Executive Summary

당사는 2022년 『ESG 위험의 분석 방법론』과 함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요소에 대한 업종별 Heatmap을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2022년 이후 산업별 주요 외부 여건 변화와 산업 단위 영향을 반영하여 환경(E) 및 사회(S) 위험 노출도에 대한 업종별 Heatmap을 Update 하였으며, 주요 산업 내 ESG 이슈의 전개 양상과 신용도 영향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 환경(E), 사회(S)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

환경(E) 요소	매우 높음		●.....▶ 시멘트, 철강(고로)	민자발전(석탄)
	높음	자동차부품, 해운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철강(전기로 등), 항공운송	
	보통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레미콘, 메모리반도체, 민자발전(LNG), 전선, 제약, 제지, 종합상사	물류, 음식료, 조선
	낮음		미디어, 통신서비스, 호텔 및 숙박, SI,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금융업	건설, 유통, 의류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사회(S) 요소

- 주1) 환경(E), 사회(S) 요소의 산업 단위 위험 노출도가 변경, 추가된 업종은 붉은색 표시
2) 사회(S) 요소 일부 리스크 유형의 위험노출도가 변경되었으나, 산업 단위 위험 노출도가 변경되지 않은 업종은 파란색 표시
3) 금융업: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총 8개 업종

에너지전환 정책과 더불어 국내 전력계통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Heatmap 대상 업종에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을 추가하였다. 또한, 레미콘, 조선, 캐피탈, 저축은행의 경우 안전관리 부담, 협력사 관리 위험 증가, 사회변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사회(S) 요소 일부 리스크 유형의 위험 노출도를 변경하였으며, 시멘트 업종은 산업 단위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가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되었다. 환경(E) 요소의 경우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2022년 기준 판단과 변화가 없다.

사회(S) 요소 Heatmap Update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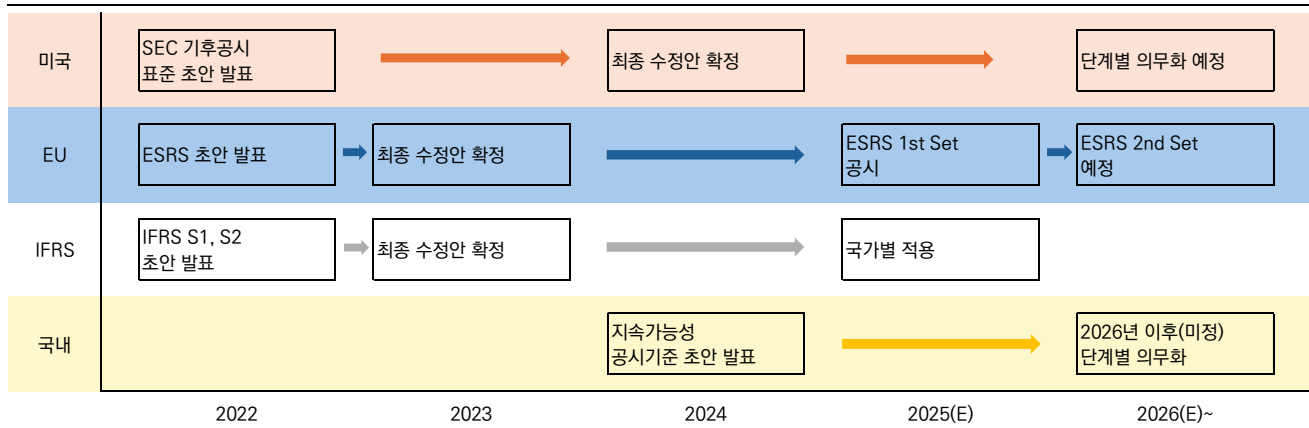
업종	주요 이슈	리스크 유형별 위험 노출도(사회(S) 요소)		산업 단위 위험 노출도(사회(S) 요소)
		구분	위험 노출도	
시멘트	중대재해처벌법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보통 → 높음	보통 → 높음
	하청업체 안전사고	협력사 관리	보통 → 높음	
레미콘	원료 공급 및 운송 이슈	협력사 관리	보통 → 높음	보통(변동 없음)
	환경규제 강화	사회변화 대응	낮음 → 보통	
조선	인구구조 변화	사회변화 대응	낮음 → 보통	높음(변동 없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PF 규제 강화	사회변화 대응	낮음 → 보통	보통(변동 없음)

□ 최근 ESG 관련 주요 이슈

1) 국내외 ESG 공시제도 진행 현황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1, S2)이 2025년부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EU 등은 별도의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EU(2023년 7월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최종안 확정)는 2025년부터, 미국(2024년 3월 SEC Climate Disclosure Rule 최종안 확정)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2024년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년 이후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공시기준을 도입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으로 일관성, 신뢰성 있는 ESG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신용평가시 활용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와 분석 기반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역별 ESG 공시 진행 상황



주1) IFRS S1, S2는 활용을 원하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시기, 공시범위 등 선택가능

자료: 금융위, 언론 보도자료 취합

주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시기는 미확정

2)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리스크 확대 - 환경(E) 요소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최근 들어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산업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당사는 기후 영향이 크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Heatmap 평가 대상 산업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위험 노출도를 ‘보통’이나 ‘낮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상 기후가 일부 산업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 침수와 같은 직접적·물리적 피해 사고, 원재료 조달 차질 등이 현실화되면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반면, 민자발전(LNG) 산업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탄력적인 운영이 용이함에 따라 하절기 이상 고온 등으로 기후 관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전력계통 내 중요성과 가동률이 보다 제고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3) 전기차 캐즘 및 화재 사고 증가 - 환경(E) 요소의 탄소중립, 사회(S) 요소의 사회변화 대응

2024년 들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유럽은 2024년 1~8월 판매량이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중단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조금 혜택 축소 가능성이 내재한 가운데 내연기관 대비 높은 가격부담, 미흡한 인프라, 하이브리드 수요 강세 등이 추가적인 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전기차가 가지는 친환경성은 여전히 유효하나, 전동화 속도 조절 기조 하에 탄소중립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업황이 단시일 내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기차 전환을 통한 탄소 저감 목표도 당초 기대치에 비해 요원해질 수 있다. 더불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태 등 최근 화재 사고 증가로 불거진 전기차 안전성 문제는 직접적인 사회(S)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전기차 구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4)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 변화 – 사회(S) 요소의 수요처 관리, 협력사 관리

티몬·위메프가 미정산 판매대금(기획재정부 발표 기준 약 1.4조원)을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금번 미정산 사태로 대다수의 중소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며, 미정산·환불 지연 우려 등으로 판매자·소비자들의 대형업체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 명시, 금융기관 예치 의무 부여 등 판매대금 정산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 쿠팡 등 상위 업체들은 금번 사태 및 후속 조치(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하위 업체들의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 대응 부담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신뢰도 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안전관리 및 이상 기후로 인한 건설원가 부담 및 공정 지연

– 사회(S) 요소의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환경(E) 요소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건설산업은 옥외작업이 많고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규모 안전사고를 경험한 건설사들의 경우 브랜드 평판 훼손으로 인한 영업경쟁력 저하, 자본시장 접근성 약화, 재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 등이 직접적인 신용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안전 관련 직접 경비 지출 이외에도 안전사고 방지와 충분한 공기 확보 과정에서 관련 원가 및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신규 수주 및 공사 착공에 보수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신규 공사 착공을 통한 건설사들의 매출 기반 유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작업일수 증가와 이상 기후로 인한 작업 지연 영향이 확대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6)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영향 확대

– 사회(S) 요소의 수요처 관리, 지배구조(G) 요소의 Compliance 및 공시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업권 내 ESG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 및 각종 제재조치를 강화해 왔으며, 2024년 7월에는 각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도입하였다. ESG 관련 각종 규제 방안 및 제도적 장치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 기업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들이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형 투자기관들의 투자이사결정에 있어 금융사들의 ESG평가등급을 반영하는 책임투자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업권 내 ESG평가등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사회(S) 및 지배구조(G) 요소 중 취약한 부분을 감독기관의 규제와 대형 투자기관들의 책임투자 등을 통해 보완해온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ESG 관련 제도적 장치 제·개정 현황과 이를 반영한 대형 투자기관들의 ESG 책임투자 관련 기조,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대응 수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Contents

들어가며	5
1. 환경(E), 사회(S)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	5
1)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산업 추가	5
2) 일부 업종의 사회(S) 요소 변경	5
3) 업종별 Heatmap Update 결과	6
4) 업종별 주요 Update 내용.....	9
2. 최근 ESG 관련 주요 이슈.....	12
1) 국내외 ESG 공시제도 진행 현황.....	12
2)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리스크 확대.....	13
3) 전기차 캐즘 및 화재 사고 증가	15
4)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 변화.....	17
5) 안전관리 및 이상 기후로 인한 건설원가 부담 및 공정 지연.....	18
6)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영향 확대.....	20

들어가며

당사는 2022년 ESG 요소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Framework 등을 담은 『ESG 위험의 분석 방법론』과 함께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요소에 대한 산업 단위의 위험 노출도를 판단하는 업종별 Heatmap을 발표하였다. 본 고에서는 2022년 이후 산업별 주요 외부 여건 변화와 산업 단위 영향을 반영하여 환경(E) 및 사회(S) 위험 노출도에 대한 업종별 Heatmap을 Update 하였으며, 주요 산업 내 ESG 이슈의 전개 양상과 신용도 영향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ESG Report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요소 업종별 Heatmap \(2022.05\)](#)

1. 환경(E), 사회(S)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

금번 환경(E), 사회(S)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에서는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¹) 산업을 추가하였으며, 일부 업종의 사회(S) 요소를 변경하였다. 환경(E) 요소의 경우 민자발전(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추가된 점을 제외하면 2022년 기준 판단과 변화가 없다.

1)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산업 추가

에너지전환 정책과 더불어 국내 전력계통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Heatmap 대상 업종에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을 추가하였다.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의 환경(E) 요소 위험 노출도는 '낮음' 수준이며,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는 '보통' 수준이다.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업종 환경(E) 요소

위험 노출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낮음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업종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	수요처 관리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협력사 관리	사회변화 대응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낮음

2) 일부 업종의 사회(S) 요소 변경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담, 원재료 및 제품 운송 과정에서의 협력사 관리 위험 증가, 인구구조 변화와 외국인력 확대를 비롯한 사회변화 대응 등을 반영하여 일부 리스크 유형의 위험 노출도를 변경하였으며, 시멘트 업종의 경우 산업 단위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가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되었다.

¹ 신재생에너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등), 신에너지(수소 연료전지, 암모니아) 등 포함

ESG Heatmap 대상 업종에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추가

일부 업종
사회(S) 요소 변경

사회(S) 요소 Heatmap Update 요약

업종	주요 이슈	리스크 유형별 위험 노출도 (사회(S) 요소)		산업 단위 위험 노출도 (사회(S) 요소)
		구분	위험 노출도	
시멘트	중대재해처벌법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보통 → 높음	보통 → 높음
	하청업체 안전사고	협력사 관리	보통 → 높음	
레미콘	원료 공급 및 운송 이슈	협력사 관리	보통 → 높음	보통 (변동 없음)
	환경규제 강화	사회변화 대응	낮음 → 보통	
조선	인구구조 변화	사회변화 대응	낮음 → 보통	높음 (변동 없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PF 규제 강화	사회변화 대응	낮음 → 보통	보통 (변동 없음)

3) 업종별 Heatmap Update 결과

민자발전(석탄) 등
16개 업종은
환경(E) 또는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가 '높음' 이상

업종별 Heatmap 대상 총 38개 산업 가운데 환경(E), 사회(S) 요소의 위험 노출도가 모두 '매우 높음'인 업종은 민자발전(석탄) 산업이 유일했다. 시멘트, 철강(고로), 철강(전기로 등),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유, 석유화학, 해운, 항공운송, 물류, 음식료, 조선, 건설, 유통, 의류 등 15개 업종은 환경(E) 또는 사회(S) 요소 리스크 익스포저가 '높음' 이상인 업종이며, 나머지 22개 업종의 경우, 환경(E), 사회(S) 요소 리스크 익스포저가 '보통' 이하였다.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요소 업종별 Heatmap Update

환경(E)요소

매우 높음			시멘트, 철강(고로)	민자발전(석탄)
높음		자동차부품, 해운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철강(전기로 등), 항공운송	
보통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레미콘, 메모리반도체, 민자발전(LNG), 전선, 제약, 제지, 종합상사	물류, 음식료, 조선	
낮음		미디어, 통신서비스, 호텔 및 숙박, SI,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금융업	건설, 유통, 의류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사회(S) 요소

- 주1) 환경(E), 사회(S) 요소의 산업 단위 위험 노출도가 변경, 추가된 업종은 붉은색 표시
 2) 사회(S) 요소 일부 리스크 유형의 위험노출도가 변경되었으나, 산업 단위 위험 노출도가 변경되지 않은 업종은 파란색 표시
 3) 금융업: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부동산신탁 총 8개 업종

환경(E) 요소 산업별 Heatmap

산업	위험 노출도	탄소중립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수자원 관리	폐기물 관리
					
민자발전(석탄)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철강(고로)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시멘트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정유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높음
석유화학	높음	높음	보통	높음	높음
철강(전기로 등)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높음
해운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자동차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보통
자동차부품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보통
항공운송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낮음
물류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민자발전(LNG)	보통	높음	보통	보통	보통
디스플레이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메모리반도체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제지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조선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도시가스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레미콘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보통
전선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보통
음식료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낮음
제약	보통	낮음	낮음	보통	보통
종합상사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통신서비스	낮음	보통	낮음	낮음	낮음
건설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보통
의류	낮음	낮음	낮음	보통	보통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낮음
SI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미디어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유통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호텔 및 숙박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은행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생명보험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손해보험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낮음
신용카드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증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캐피탈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저축은행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부동산신탁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주) Heatmap Update 대상 붉은색 표시

사회(S) 요소 산업별 Heatmap

산업 구분	위험 노출도	수요처 관리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협력사 관리	사회변화 대응
					
민자발전(석탄)	매우 높음	낮음	보통	보통	매우 높음
자동차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건설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
물류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
시멘트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
조선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통
항공운송	높음	보통	높음	낮음	높음
철강	높음	낮음	높음	보통	보통
정유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석유화학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보통
의류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유통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높음
음식료	높음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레미콘	보통	보통	보통	높음	보통
자동차부품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높음
제약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전선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디스플레이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메모리반도체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호텔 및 숙박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높음
해운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보통
제지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높음
민자발전(LNG)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보통
통신서비스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미디어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높음
SI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보통
종합상사	보통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낮음
은행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생명보험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손해보험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신용카드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증권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캐피탈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저축은행	보통	높음	낮음	낮음	보통
부동산신탁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낮음
도시가스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보통

주) Heatmap 업데이트 대상 붉은색 표시

4) 업종별 주요 Update 내용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환경(E) 요소

낮음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	--------------	---	---	---	---

대표적 저탄소 전원으로
환경(E) 요소 위험 노출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대표적인 저탄소 전원으로 에너지전환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이며, 생산 과정에서 수자원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직접적 위험 노출도 크지 않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발전량 변동 위험이 존재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을 통한 장기고정계약,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보완이 관련 위험을 일정 수준 완화하고 있다.

사회(S) 요소

보통	민자발전(신재생에너지)				
----	--------------	---	---	---	---

안전 관리, 협력사 관리
리스크 등 감안한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
보통 수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생산 전력(자가소비 제외)을 전력거래소에서 전량 구매함에 따라 수요처 관리 관련 위험 수준이 제한적이다. 국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업종으로 사회인식 및 정부정책 압력도 낮은 수준이다. 발전소 건설, 발전설비 보수와 관련한 협력사와의 사업적 연계성이 높아 협력사 관리 관련 위험은 일정부분 내재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관련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멘트

사회(S) 요소

높음	시멘트				
----	-----	---	---	---	---

중대산업재해 발생,
화물연대 파업 등 반영하여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
'높음'으로 조정

시멘트 업종의 사회(S) 요소 리스크 유형 중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협력사 관리 위험 노출도를 각각 '보통'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산업 단위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변경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2022.01)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협력업체 안전사고, 화물연대 파업 영향 등으로 협력사 관리 위험 노출도도 상승하고 있다.

사회(S) 요소 리스크 유형별 이슈 - 시멘트

유형	주요 이슈	위험 노출도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생산 중단 등에 따른 영업 차질 발생 가능 - 시멘트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 다수 발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확대	보통 → 높음
협력사 관리	- 협력업체 안전사고, 화물연대 파업 영향 등으로 시멘트 원료 조달, 운송 과정에서 협력사 관리 위험 수준 증가	보통 → 높음

레미콘

사회(S) 요소

보통	레미콘				
----	-----	---	---	---	---

사회(S) 요소 내
협력사 관리, 사회변화 대응
위험 노출도 상향

레미콘 업종의 사회(S) 요소에서 협력사 관리 위험 노출도를 '보통'에서 '높음'으로, 사회변화 대응 위험 노출도를 '낮음'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는 '보통'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멘트 원료 도입, 레미콘 운송 과정에서의 협력사 관리 리스크 확대, 환경규제 및 주민 여론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였다.

사회(S) 요소 리스크 유형별 이슈 - 레미콘

유형	주요 이슈	위험 노출도
협력사 관리	- 믹서트럭 신규 등록 제한 연장 등으로 레미콘 운송사업자에 대한 협상력 약화 → 운송비 부담 및 공급 차질 우려 확대 - 화물연대 파업 영향에 따른 원료(시멘트) 조달 차질 사례 발생	보통 → 높음
사회변화 대응	- 수도권 레미콘 공장 철수, 골재 채취량 감소 등 환경규제 강화, 주민 민원 영향 가시화 - 아파트 붕괴 사고, 하자 논란 등으로 인해 레미콘 업계의 품질관리 강화 요구 증가(시멘트 투입 비율 확대, 골재 품질 관리 등)	낮음 → 보통

조선

사회(S)요소

높음	조선				
----	----	---	---	---	---

인구구조 변화 등 반영하여
사회(S) 요소 내
사회변화 대응
위험 노출도 상향

조선산업의 경우, 사회(S) 요소 유형 중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위험 노출도를 '낮음'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산업 단위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는 '높음'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에 있어,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와 3D업종 근무 기피현상, 외국인력 확대 추세 등이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사회(S) 요소 리스크 유형별 이슈 - 조선

유형	주요 이슈	위험 노출도
사회변화 대응	- 노동집약적인 조선업 특성상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3D업종 근무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외국인력 확대 추세 등에 따라 사회변화 대응 위험 증가	낮음 → 보통

금융(캐피탈, 저축은행)

사회(S) 요소

보통	캐피탈, 저축은행				
----	-----------	---	---	---	---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등 반영하여
캐피탈, 저축은행
사회(S) 요소 사회변화 대응
위험 노출도 상향

금융업종 내 제2금융권(캐피탈, 저축은행)의 사회(S) 요소 중 사회변화 대응의 위험 노출도를 '낮음'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산업 단위 사회(S) 요소 위험 노출도는 '보통'으로 변화가 없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제한적인 점과 정부 정책의 규제강도가 1금융권 대비 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사회변화 대응 위험 노출도를 '낮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관련 규제 수준과 각종 정책 시행이 제2금융권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높아진 규제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 노출 수준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S) 요소 리스크 유형별 이슈 - 캐피탈, 저축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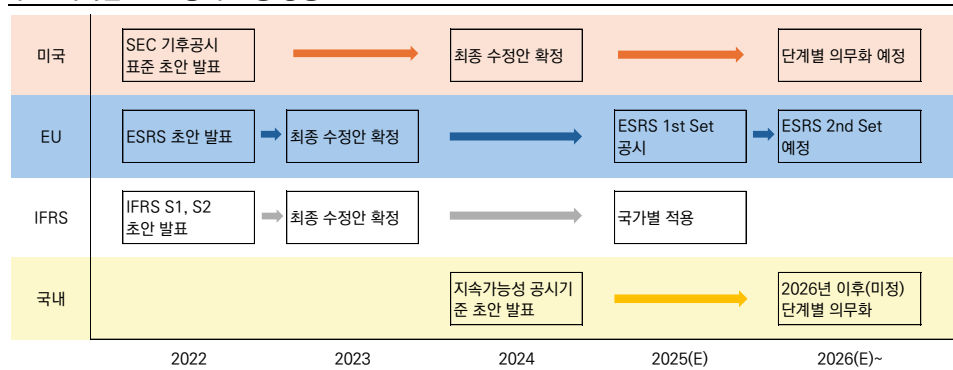
유형	주요 이슈	위험 노출도
사회변화 대응	- 2024년 4월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안' 발표하여 금융 기관들의 보유 부동산PF자산의 재구조화 및 경·공매 등의 정리 여건 조성 - 2024년 1월 금융감독원의 제2금융권에 대한 부동산PF 리스크 대비 총당금 적립수준 점검	낮음 → 보통

2. 최근 ESG 관련 주요 이슈

1) 국내외 ESG 공시제도 진행 현황

이해관계자에 대한 ESG 관련 정보 제공 확대와 업체간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ESG 공시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2022년 3월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1, S2)이 2023년 6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5년부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미국, EU 등은 별도의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EU(2023년 7월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최종안 확정)는 2025년부터, 미국(2024년 3월 SEC Climate Disclosure Rule 최종안 확정)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²이다.

주요 지역별 ESG 공시 진행 상황



주1) IFRS S1, S2는 활용을 원하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적용시기, 공시범위 등 선택가능 자료: 금융위, 언론 보도자료 취합
 2)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시기는 미확정

2024년 4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2024년 4월 국내에서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다(제1호, 제2호, 제101호).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시작점으로 하여,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국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초안이 제정되었다. 2024년 5~8월 접수된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검토된 이후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

구분		명칭	비고
의무 공시기준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 (IFRS S1 기반)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 (IFRS S2 기반)
추가(선택) 공시기준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선택)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자료: 금융위 보도자료

² SEC Climate Disclosure Rule에 대하여 25개의 공화당 주 법무부 장관(State Attorney General) 등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4년 4월 SEC는 법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기후 공시 적용(implementation)을 잠시 중단하나, 해당 공시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에 실제 적용 시기 모니터링 필요.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중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단,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실 및 근거를 공시할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 생략 가능).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보고기간의 기업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현재,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예상 재무적 영향) 등을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6년 이후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공시기준을 도입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도입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으로 일관성, 신뢰성 있는 ESG 정보들이 각 업체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가운데 해당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신용평가시 활용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정량적 ESG 공시 정보(산업전반(의무) 지표, 산업기반(선택) 지표 등) 확대에 힘입어 분석 기반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기후 관련 산업전반(의무) 지표

구분	비고
온실가스 배출량	-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톤(tonnes of CO2 equivalent)으로 표시(Scope 1, 2, 3)
기후 관련 전환 위험	-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	-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기후 관련 기회	- 기후 관련 기회에 부합하는 자산 또는 사업활동의 금액 및 백분율
자본 배치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비하여 배치된 자본적 지출, 자금조달 또는 투자 금액
내부 탄소 가격	- 기업이 탄소 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톤당 가격 공시 여부는 선택)
보상	- 기후 관련 사항이 경영진 보상에 고려되는지와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기술 - 당기에 인식된 경영진 보상에서 기후 관련 고려사항과 연계된 보상의 백분율

주)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국제 동향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당사 정리

2)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리스크 확대

- 환경(E) 요소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이상 기후로 인한
산업 및 개별 기업 영향 증대

최근 들어 이상 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산업 및 개별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요인은 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등을 의미하지만, 특정 산업의 경우에는 이상 기후가 수급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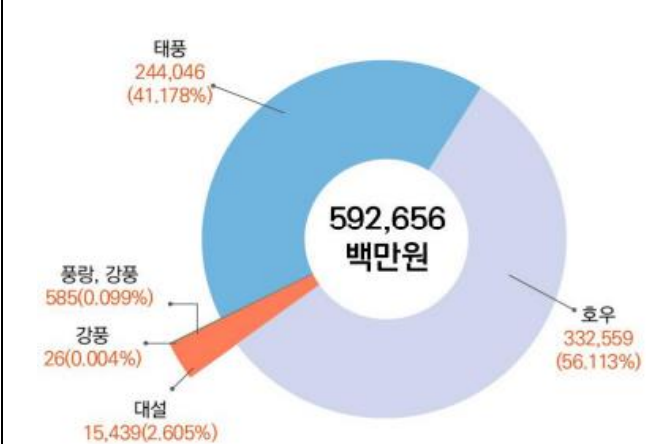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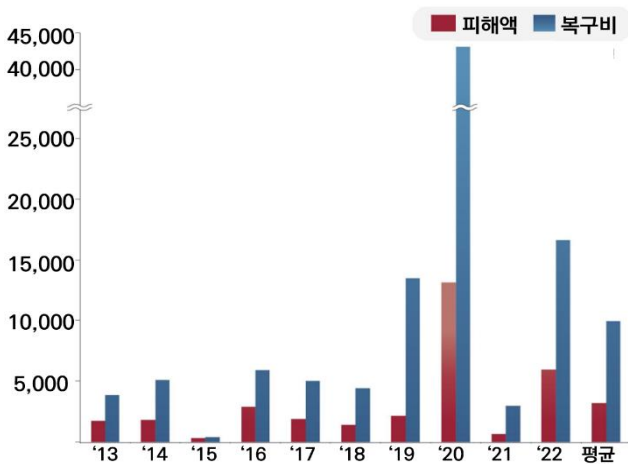
당사는 기후 영향이 크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Heatmap 평가 대상 산업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관련 위험 노출도를 '보통'이나 '낮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상 기후가 일부 산업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업장 침수와 같은 직접적·물리적 피해 사고까지 현실화되면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 역량이 점차 중요해지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재산피해액과 복구비용은 각각 5,927억원과 1조 6,637억원이며, 원인별 재산피해액을 보면 호우(56%, 3,326억원)와 태풍(41%, 2,440억원)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2013~2022년)

(단위: 억원) 원인별 재산피해 현황 - 2022년

(단위: 백만원)



출처: 2022 재해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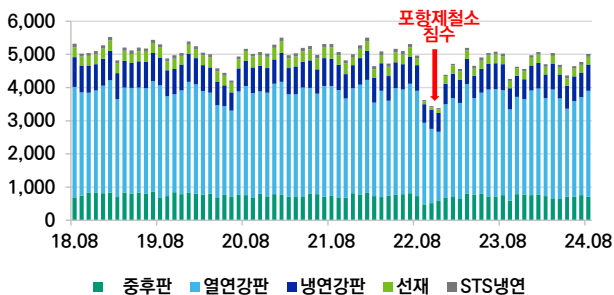
포항제철소 침수 당시
철강 공급사들 전반에
일시적 마비 초래

국내에서는 2022년 9월 태풍에 의한 포항제철소(포스코) 침수사고를 대표적인 재해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당시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 피해가 크지 않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작업으로 복구기간을 최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소의 조업 정상화까지는 수개월('22.09 ~ '23.01)이 소요되었다. 동기간 포스코가 손실로 반영한 직·간접적 피해규모는 약 1.3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국내 철강 상공정시장의 독과점적 구조상 포스코 개별업체의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하공정, 재압연 및 유통업체 등 철강 공급사들 전반의 영업활동을 제약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강종별 생산량

(단위: 천톤) 포스코 침수로 인한 손익 영향

(단위: 억원)



구분	23.1Q	23.2Q	24.1Q	합계
생산/판매감소	2,221	5,683	-	7,904
재고손실	944	5	(-)60	889
복구비용	916	2,884	610	4,410
합계	4,081	8,572	550	13,203

주) 상기 외 영업외비용으로 유형자산손상 2,356억원 반영

자료: 한국철강협회, 포스코홀딩스 IR

수입의존도 높은 업종은
해외 이상 기후 영향에도 노출

또한,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은 해외 주요지역에서의 이상 기후 현상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철강업의 경우 철광석 및 유연탄 수입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호주에서 최근 몇 년간 산불, 홍수,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지 광산업체들의 공급 차질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음식료 산업에서도 잦아진 폭염, 한파, 가뭄 및 이상 기온 등에 따른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생산·수출 감소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 음식료 업체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민자발전(LNG) 산업의 경우
기후 관련 변동성 확대로
전력 계통 내 중요성 제고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이상 기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자발전(LNG) 산업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탄력적인 운영이 용이함에 따라 기후 관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전력계통 내 중요성과 가동률이 보다 제고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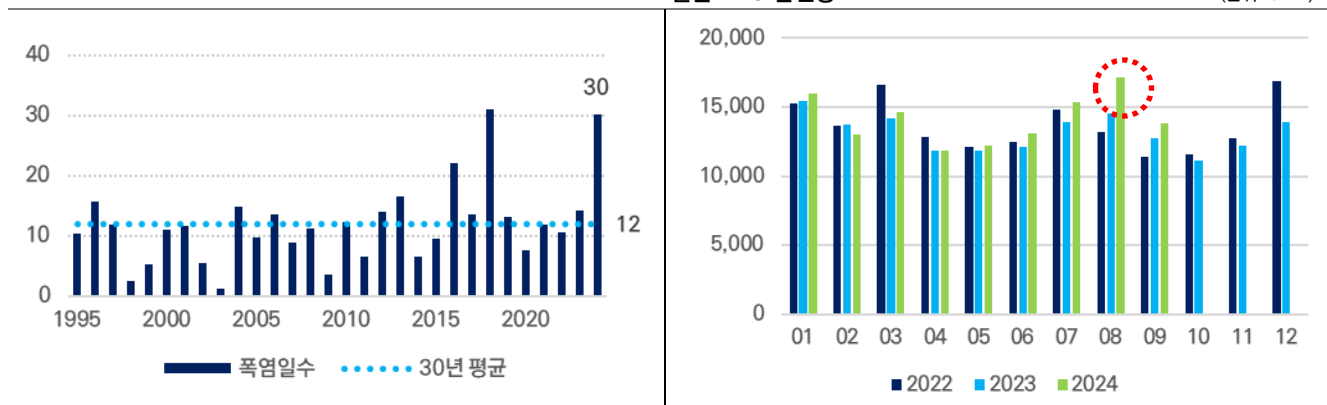
특히, 하절기 이상 고온 등으로 전력소비가 예상 대비 증가하는 경우 전력수급 내 LNG 발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민자 LNG 발전사의 경우 개별 발전기의 가동을 증가와 더불어 전력계통 내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발전설비 가동으로 전력판매가격(SMP)도 상승함에 따라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2024년에는 여름철 폭염 일수(기상청 측정 62개 지점 평균)가 약 30일로 과거 대비 크게 증가(1995~2024년 연평균 12일)하였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2024년 8월의 경우 전력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약 6%(3,557GWh) 증가하였으며, 수요 증가분의 약 70%(2,544GWh)가 LNG 발전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폭염일수(1995~2024년)

(단위: 일) 월별 LNG 발전량

(단위: GWh)



자료: 기상청

자료: 전력거래소

3) 전기차 캐즘 및 화재 사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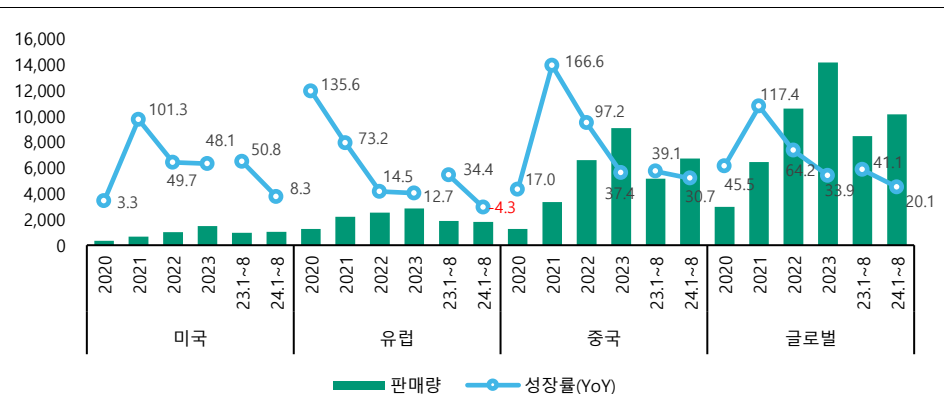
- 환경(E) 요소의 탄소중립, 사회(S) 요소의 사회변화 대응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 약세

2024년 들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2024년 1~8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약 1천만 대로, 840만 대를 기록한 2023년 1~8월에 비해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요 시장 및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단위: 천대, %)



주) EV, PHEV, FCEV 합산 판매량 기준

자료: Mark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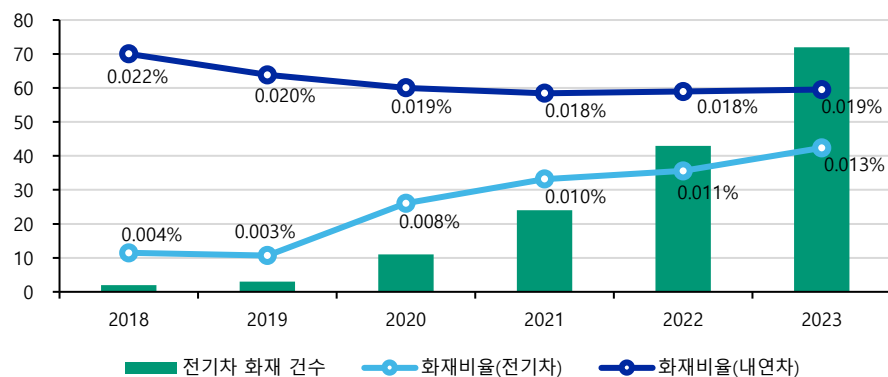
특히, 유럽과 미국 시장의 개즘(Chasm)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럽은 2024년 1~8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만 대 가량 감소하면서 주요 시장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였다. 보조금 지급 중단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조금 혜택 축소 가능성이 내재한 가운데, 내연기관 대비 높은 가격부담, 미흡한 인프라, 하이브리드 수요 강세 등이 추가적인 시장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 확대

더불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태 등 최근 화재 사고 증가로 불거진 전기차 안전성 문제는 직접적인 사회(S)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전기차 구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2023년 기준 전기차 화재비율은 0.013%로,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 않지만, 열폭주가 나타나는 배터리 특성상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크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8배, 인력도 2.5배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전기차 화재사고 추이

(단위: 건수)



주) 화재비율 = 연도별 누적 등록대수 대비 비율

자료: 소방청

전기차 전환 속도 둔화로
탄소중립 모멘텀 약화

전기차가 가지는 친환경성은 여전히 유효하나, 전동화 속도 조절 기조 하에 탄소중립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부터 주요 국가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축소하였으며, 완성차 및 2차전지 업체들 또한 전방 수요 둔화에 대응하여 생산목표를 축소하고 설비 준공시점을 연기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업황이 단시일 내에 크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전기차 전환을 통한 탄소 저감 목표도 당초 기대치에 비해 요원해질 수 있다.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제조업체 간 협력을 통해 안전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4년 9월에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은 배터리 정보 공개, 제작사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강화,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설치 확대 등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도 8월 중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이상 충전된 전기차의 출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다만, 실질적으로 화재율을 낮추거나 화재 대응력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여 수요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024.9.6)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전기차 안전성 확보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2025년 2월 → 2024년 10월) - 배터리 정보공개(제조사, 형태, 원료 정보 추가) - 배터리 이력관리제 2025년 2월 시행
	사업자 책임 강화	- 자동차 제작사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차량 무상점검 매년 실시 권고
	배터리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무료 설치 및 Update - BMS 무상제공 기간 연장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	-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및 교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 지하주차장 내 흡식 스프링클러 설치 및 점검 강화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 시기 유예 - 지하주차장 내 방화 소재 사용 관련 법안 개정 추진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전국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전기차 충전시설 정보 의무 제공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전기차 화재 관련 교육·홍보 및 매뉴얼 강화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방안 마련	-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지속

자료: 정부 보도자료

4)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 변화

- 사회(S) 요소의 수요처 관리, 협력사 관리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 업계 신뢰도 하락

2024년 7월, 쿠팡 산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였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정산 대금 규모는 약 1.4조원이며, 티몬·위메프가 미정산 판매대금을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은 2023년 기준 국내 소매유통채널 내 50%를 상회하는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유통채널이다. 이커머스 업계, 특히 오픈마켓 서비스에 대한 판매자·소비자 신뢰도는 업체별 영업실적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의 수요처 관리 및 협력사 관리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번 미정산 사태로 대다수의 중소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며, 미정산·환불 지연 우려 등으로 판매자·소비자들의 대형업체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충분하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사업자 대비 시장지위가 열위하고 자본여력이 미흡한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수요처·협력사(입점 판매자) 관리 부담은 커지고 있다.

티메프 사태 일지

일 자	내 용
7월 8일	- 위메프, 입점 판매자에게 5월분 대금 미정산
7월 22일	-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5월분 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 안내
7월 24일	-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처리 지연, 결제대행사 철수
7월 29일	-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 구영배 쿠팡 대표 출국금지 조치
7월 30일	-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에 대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시행
8월 2일	-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 채권자협의회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작
8월 30일	- 티몬·위메프 - 채권자협의회 간 자율 구조조정 협의 불발
9월 10일	-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자료: 언론보도 취합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
업계 신뢰도 회복 노력 진행 중

티메프 사태 이후 정부와 각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신뢰도 회복과 건전한 이커머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 명시, 금융기관 예치 의무 부여 등 판매대금 정산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입증하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예상)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업체	온라인 플랫폼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규정 없음	수수료수익 100억원 or 거래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사업자, 또는 수수료수익 1,000억원 or 거래액 1조원 이상 플랫폼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
판매대금 정산 기한	규정 없음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 보관	규정 없음	미정산 판매대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

주) 개정안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언론 보도자료 취합

네이버, 쿠팡 등 이미 정산주기가 짧고 충분한 자본여력을 갖춘 상위 업체들의 경우 금번 사태 및 후속 조치(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정산주기가 상대적으로 긴 중하위 업체들의 경우 단기 유동성 부담이 증가하고 재무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판매자와 이커머스 업체 간 상생,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신뢰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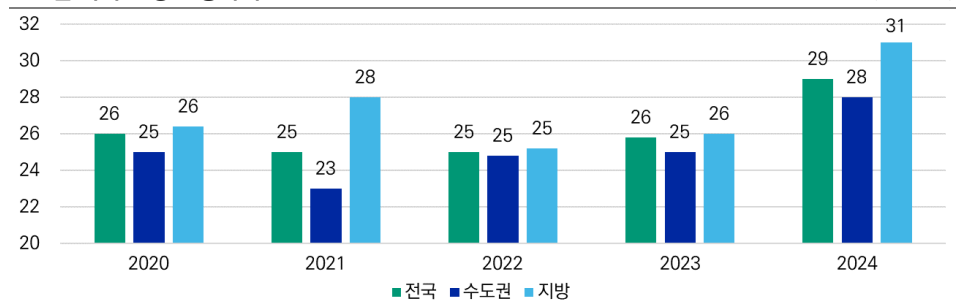
5) 안전관리 및 이상 기후로 인한 건설원가 부담 및 공정 지연

- 사회(S) 요소의 노사관계 및 안전관리, 환경(E) 요소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안전관리 및 이상 기후로 인한
건설산업 영향 확대

건설산업은 옥외작업이 많고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는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2~2023년 건설 중인 건축물의 붕괴 등 대규모 안전사고를 경험한 건설사들의 경우 브랜드 평판 훼손으로 인한 영업경쟁력 저하, 자본시장 접근성 약화, 재시공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 등이 직접적인 신용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안전관리, 이상 기후 등으로 공사원가 상승,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 리스크 등이 현실화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도별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



주) 해당연도 입주아파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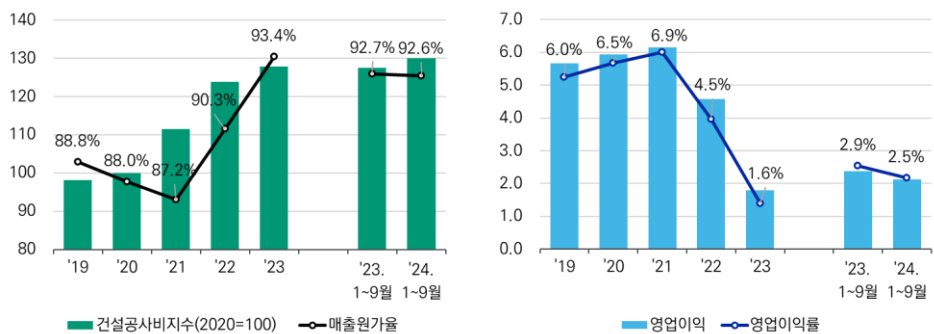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안전관리 관련
직간접 원가 및
비용 부담 상승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어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등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 관련 직접 경비 지출 이외에도 안전사고 방지와 충분한 공기 확보 과정에서 관련 원가 및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증가한 원가 부담을 기존 계약의 도급금액 증액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발주처에 전가하고 있지만, 기존 진행 사업장의 경우 도급액 증액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을 건설사가 부담하면서 원가부담이 크게 확대하였다. 인플레이션 기조 하에서 자재비 상승과 더불어 작업일수 증가로 노무비, 외주비 등도 크게 증가한 결과 주요 건설사들의 합산 원가율은 2023년 약 93%로 상승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2% 내외로 하락하였다(2024년 시공능력 평가 50위 내 건설사 중 분반기 실적을 공시하는 주요 29개사 합산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 및 주요 건설사 합산 매출원가율 주요 건설사 합산 영업이익성 (단위: 조원)



주) 2024년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 50위내 건설사 중 분반기실적을 공시하는 29개사 별도기준 합산(건설 외 사업비중이 높은 일부 건설사 제외)
자료: DART 공시, 국토교통부

신규 수주 계약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과거 대비 확대된 원가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급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원가 부담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도급금액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규 수주 및 공사 착공에 보수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과 신규 개발사업의 원가 상승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신규 공사 착공을 통한 건설사들의 매출 기반 유지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 증대

건설사들의 책임준공 미이행 리스크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건설사들은 당초 계획 대비 공기가 지연될 경우 인력 및 자재 등의 집중적인 투입을 통해 준공기한을 대부분 준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작업일수 증가와 더불어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작업 지연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책임준공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수주 시점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건설사가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시행사의 관련 PF 차입금 상환 의무를 건설사가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6)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영향 확대 - 사회(S) 요소의 수요처 관리, 지배구조(G) 요소의 Compliance 및 공시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
신용평가시 고려 필요

금융업의 제한적인 ESG 위험 노출도(환경(E) 요소 '낮음', 사회(S) 요소 '보통'), 금융사들에 대한 ESG 전문 평가기관들의 양호한 평가등급³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로 이어지면서 신용평가 관점에서도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은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 사태(라임, 옵티머스 등) 등의 불완전판매와 직원 횡령,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이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인해 1,300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해당 사건은 금융사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거래로 투자자들의 자산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해당 금융사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ESG 관련 금융사고 중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불완전판매는 ESG 요소 중 사회(S) 요소의 수요처 관리와 지배구조(G) 요소의 Compliance 및 공시에 해당되며, 직원 횡령 및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 등은 지배구조(G) 요소의 Compliance 및 공시로 분류된다.

당사는 금융업 사회(S) 요소의 수요처 관리 위험 노출도를 대부분 '높음'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별 업체의 불공정거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ESG 위험 분석방법론 적용시 반영하고 있다. 각 항목들에 대한 ESG 전문 평가기관들의 평가등급은 관련 금융사고의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는 금융업권의 특성을 바탕으로 타 업권 대비 양호한 환경(E)과 일부 사회(S) 요소 점수, 금융사들의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의 ESG 관련 금융사고의 손실액 등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지배구조(G) 요소의 경우, 정부 및 금융당국이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감독 및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금융업체들에 비해 ESG 관련 사고의 빈도나 범위가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다만,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확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업권 내 ESG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 및 각종 제재조치를 강화해 왔다. 2023년 12월 국내 9개 증권사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례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한 특혜성 환매 의혹 등의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2024년 7월 3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면서 각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책무 구조도를 발표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금융사 스스로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자율점검 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금번 개정안은 금융사의 대표이사인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임원들도 자신의 책무에 관련한 내부통제 의무를 지게 한 것이 기존 법령과의 두드러진 차이이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은 2025년 1월 2일까지 각 임원들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명시한 문서(책무 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책무구조도의 제출 대상은 2027년까지 증권사, 보험사, 카드/캐피탈, 저축은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³ 한국 ESG기준원 부여 등급

금융당국의 이러한 ESG 관련 각종 규제 방안 및 제도적 장치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물론, 기업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들이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개정(2024.07.03 시행)

변경내용	비고
직책별 책무구조도 마련	- 모든 임원에게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이 사전에 명확하게 부여 -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책임자를 특정 - 금융회사의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의 책임을 배분한 구조도 - 20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2025.01.02까지 시범운영 가능) - 은행과 지주회사 대상 우선 실시 (추후 확대추진 예정)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 각 임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영역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 특히,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강화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조치	-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와 관련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신분 제재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신설

자료: 금융감독원, 당사 재가공

대형 투자기관의
투자의사결정 시
ESG평가등급 적극 반영

한편,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투자기관들의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금융사들의 ESG평가등급을 반영하는 책임투자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업권 내 ESG평가등급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의 ESG평가등급을 적극적으로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024년 6월부터 국내 주식거래 증권사 선정 평가에서 ESG 관련 평가 배점 비중을 2배로 늘리고 평가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매년 두차례 주식 거래 증권사를 선정해 국내 주식을 매매한다. 투자 대상 선정에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 물량 및 수수료에 차등을 둔다.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ESG 관련 항목이 5점에서 10점으로 오른 가운데, 거래 증권사의 선정여부를 가르는 점수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ESG평가등급의 중요성이 과거 대비 급격히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로 선정된 중소형 증권사 중 2024년 3월 'ESG 위원회'를 신설한 유진투자증권과 올해 상반기 '지속가능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한 흥국증권, LS증권이 포함된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민연금 ESG 책임투자 History

해당연월	비고
2018.07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
2019.11	-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책임투자 원칙」 도입
2020.11	-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2021.06	- 국내채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2021.12	-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방향 설명서」 공개 -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모니터링 시 책임투자 요소 고려 방안 마련
2022.06	- IFRS Sustainability Alliance(舊 SASB Alliance) 가입 - 거래증권사 선정 시 책임투자보고서 발간 여부 포함
2023.03	-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 평가에 책임투자 항목 관련 배점 확대
2023.04	- 해외주식 채권 직접운용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당사 재가공

금융기관들은 사회(S) 및 지배구조(G) 요소 중 취약한 부분을 감독기관의 규제와 대형 투자기관들의 책임투자 등을 통해 보완해온 만큼, 향후 금융당국의 ESG 관련 제도적 장치 제·개정 현황과 이를 반영한 대형 투자기관들의 ESG 책임투자 관련 기조,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대응 수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Appendix. 관련 리포트

- [\[ESG\] 산업별 영향 분석 I : 민간석탄발전 - 탈석탄 기조 속 민간석탄발전사의 리스크 요인과 신용도 전망 \(2021.03\)](#)
- [\[ESG\] 산업별 영향 분석 II : 석유화학 - 높아진 환경규제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2021.09\)](#)
- [\[ESG\] 수소경제\(Hydrogen Economy\), 주요 그룹사별 추진 현황 및 Credit관점 함의 - 그룹별 동상 이몽\(同床異夢\), 투자부담 감내하며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쉽지 않은 여정 \(2021.09\)](#)
- [\[ESG\] 강화되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철강업계의 대응력 점검 \(2021.10\)](#)
- [\[ESG\] 전기차 시대의 정유산업,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을 준비할 때 \(2021.10\)](#)
- [\[ESG\] 코 앞으로 다가온 현존선 온실가스 감축 규제, 해운사별 리스크 노출도와 규제에 따른 시황 전망은? \(2022.03\)](#)
- [\[ESG\]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요소 업종별 Heatmap \(2022.05\)](#)
- [KIS 신용평가 일반론 - ESG 위험의 분석 \(2022.07\)](#)
-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 대한 주요 이슈 점검 - 실적 전망, 사채 발행한도, ESG위험 익스포저 분석을 중심으로 \(2022.09\)](#)
- [\[ESG\] 험난한 여정이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 \(I\) - Anti-ESG 기조와 규제강화, ESG 정보 공시, KIS의 신용평가 반영 현황 \(2023.11\)](#)
- [\[ESG\] 험난한 여정이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 \(II\) - 주요 업종별 ESG 환경 변화 및 대응 현황 \(2023.11\)](#)

유의사항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당사”)가 공시하는 신용등급은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뜻하며, 당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 리서치 자료(“간행물”)는 발행사/기관, 신용공여,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상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당사의 현재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란 만기 도래하는 계약상의 채무(financial obligations)를 발행사/기관이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 및 부도시 예상되는 금융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또는 가격변동성 등 기타 다른 위험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과 당사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견해는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또한 간행물에는 계량모델에 근거한 신용위험의 추정치와 관련 의견 또는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투자자문이나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조언을 제공하지도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나 간행물은 해당 정보의 사용자나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투자결정에 있어서 어떤 증권을 매매하거나 보유하라는 권고 또는 권유나 사실의 서술이 아니라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입각한 당사의 의견으로서만 해석되고 또 해석되어야만 하며, 특정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의 적격성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는 각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증권 각각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러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하고 간행물을 발표합니다.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을 이용하여 투자자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무 전문가 혹은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을 수령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발행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자료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사/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기관이 아니므로 신용평가와 간행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있어서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한,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실수의 가능성 때문에 해당 정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데 대하여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어떠한 증명이나 서명, 보증 또는 단언을 할 수 없으며,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정보들은 신용등급 부여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발행사/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따라서 당해 신용등급이나 기타 의견 또는 정보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상업성 또는 특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당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보증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간접, 특별,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해(현재 혹은 장래의 손실 당사가 부여한 특정 신용등급의 대상이 아닌 관련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사전에 그 같은 손실 또는 손해 가능성에 대해 고지 받았더라도,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사 및 그의 이사,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라이선서 및 공급자는 자신들의 과실(단, 고의 또는 기타 법률상 배제될 수 없는 종류의 책임은 제외함) 또는 자신들의 통제 범위 내에 또는 밖에 있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여기 포함된 정보, 동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불가능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느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발생한 어떠한 직접 손실이나 손해 또는 보상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당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는 저작권법 등 법의 보호를 받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누구도, 이 정보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어떤 형태나 방식 또는 수단으로든, 복제 또는 생산, 배포, 전송, 전달, 유포, 재배포 또는 재판매,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